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배포일시	2018. 1. 30.(화) 총 46매(본문 8, 붙임 38)	
담당 부서 기획담당관실	담당 자	·과장 강주엽, 서기관 최아름, 사무관 정덕기, 위은환 ·☎ (044) 201-3197, 3205, 3203 ※ 세부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9페이지 참조	
보 도 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16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교통이용 부담 낮춘다

- ◆ 기숙사 확충·신혼희망타운 입지선정...주거복지로드맵 본격화
- ◆ 건설산업 혁신·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확대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건설·교통 분야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한해 건설·교통 분야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주거 서비스 개선,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1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1. 교통서비스 및 생활편의 향상...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하고, 新서비스 확대

- 먼저, 교통비 부담 완화, 서비스 개선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 및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하여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한다.
 - 아울러,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현행 30 → 50km)하여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히고,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도 혁신한다.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 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여 국민들의 이동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 아울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에 대해 균질한 수준의 이용 품질,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고속철도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예타중)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또한,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 설치한다.
-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내선에 생체인식(지문·정맥 등) 활용 탑승수속을 시행하고 직항 승객의 보안봉투 사용 폐지('18.7), 택시 정액요금 제도 도입(인천·김포공항 등), 항공-철도 티켓 통합발권 시스템 구축 등 불편사항을 중점 개선한다.
- 아울러,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고·침수 등 중대손상으로 보험사가 폐차 처분한 차량이 불법 재유통 되지 않도록 폐차 이행 확인제를 도입하고, 신차 구입 등 자동차 등록 증가에 대응하여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대폭 확대한다.

2. 서민주거안정...주거복지로드맵 이행 및 새로운 주거서비스 제공

- 올 한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8만호 등 공적주택 총 18.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복지로드맵의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한다.
- (청년)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한 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해 LH 전세 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신혼)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 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공모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 (어르신) 오는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하여 마이홈센터를 확대('17년 42곳 → '18년 52곳)하고, 주거복지사 등 인력 확충, 법률·금융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시장 조성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자 가입을 허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세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
- * 대출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80% 이하(대출채권 60% 이하)
-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 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세종·오산·김포 298세대)를 준공('18.12)하고 추가 조성사업도 착수('18.6, 동탄 등)한다.
 - 아울러,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및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 최근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이상 과열된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여 투기수요 확산을 차단하고, 新 DTI(1.31~)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8.4) 등 8.2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3. 일자리 창출...건설·운수업 혁신하고 청년·창업 지원 강화

- 전체 일자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표 일자리 산업인 건설·운수 분야를 혁신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진다.
- 외형·물량 키우기에 치중했던 건설산업을 공정경쟁에 기반한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 업종개편을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활성화 등 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또한, 하도급 정보공개·적정성 심사 강화 등 하도급 업체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 화물운수업에 대해서도 택배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업종 개편(용달·개별·일반 → 개인·법인)을 추진하고, 위수탁 차주보호·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 * 업종개편, 지입제 개선 등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국회 계류 중) 개정 후, 6개월 뒤 시행
- 아울러, 취약분야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 사업자의 비용전가 금지,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 군 운전 장병 등 청년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군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버스 자격취득 교육, 자격취득비를 지원하고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 되도록 지원한다.
- 공공인프라 개방,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첨단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 수자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댐·정수장 등을 신기술 시험공간으로 개방하고,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또한, 창업 및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공유한다.

4. 성장동력...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 높이고, 해외진출 확대 모멘텀 마련

- 민간투자 확대 유도,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등을 통해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도 제고한다.
 -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진흥 정책,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장 심사 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공모 면제요건 축소 등을 통해 리츠 공모·상장을 활성화한다.
 - 스마트 물관리도 본격화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수량·수질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18.4~'20, 세종시)하고, 선박 담수플랜트 기술 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 공급시설 도입(구미 산단)을 가시화해 나간다.
 -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하고 기존 운수 업체와 상생 발전을 병행하여 건전한 O2O 생태계를 조성하며, 첨단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술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 급성장중인 동북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 등 주요국과 하늘길 확대 및 전략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공항이 세계 6위의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도록 4단계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3단계 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등 배후단지도 확충한다.
- 해외수주도 반등세 굳히기에 나선다. 특히, 오는 6월까지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하여 해외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투자개발사업(PPP)에 대해 기획·정보·금융*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 * 신북방·신남방 인프라개발 지원 펀드 등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추가 조성
 - 권역별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기초 인프라 계획을 수립('18.6) 하여 제공하고, 관련 후속사업을 발굴하여 선단형 진출을 추진

하는 등 전략적 해외 외교를 확대해 나간다.

5. 미래대비...인구감소·저성장시대 준비 및 효율적 국토 이용

- 저성장, 스마트 기술, 안전 강조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에는 향후 20년간의 국토비전을 담는다.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의 압축적 재생*, 국민 생활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스마트·안전 등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한다.
 - * 도시재생 등 既개발지 중심의 공간 활용, 교통·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강화 등
 - 실증기반 정책을 위한 격자형 국토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 강화를 위해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 공론화 위원회 활용 등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한반도 신경계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등 기반시설 연결도 추진해 나간다.
-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자립역량도 강화한다. 지난해 지정된 68곳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도시 등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 ☞ 균형발전, 도시재생 세부내용 등 관련 일부 사항은 본 보도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균형발전 관련 행사(2.1) 이후 별도로 배포 예정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요 거점 시설을 복합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서울역·수서역·부산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 귀속한 민자 역사 일부도 창업공간, 보육원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한다.
 - 주요 공항 배후지역을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등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항경제권 구상계획'을 수립('18.8)하고, 시범

선도공항을 선정(3~4곳, '18.11)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6. 국민 안전 및 혁신성장 (1.23일, 1.24일 업무보고시 보도자료 배포)

□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기 (~'22)' 달성을 위해 관행개선, 안전기준 보완 등을 중점 추진한다.

* 건설현장 사망자수 줄이기: '16년 1.76 → '18년 1.50 → '22년 0.70 (사망만인율,‰)

*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 '17년 4,191명(잠정) → '18년 3,800명대 → '22년 2,000명 수준

○ 건설현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건설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2진 아웃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 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별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

○ 지진·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건축물은 지진·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단계적 보강을 유도할 계획이다.

*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가연성 외장재 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화재진압 및 불법 시정조치 등에 활용

- 또한,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자재 등 취약분야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교통 분야는 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도심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저속 운행 유도시설(차로폭 축소, 지그재그 도로 등)을 설치하고



기반 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기존차량은 장착지원(15만 대) 후 과태료 부과, 신규차량은 승합차 도입 후 화물차 도입

□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도 본격 가시화해 나간다. 기술발전이 실증, 창업,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정책내용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1단계 본격 착수(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기존도시 스마트시티화(지역특화 4곳, 재생 4곳 등)
자율차	·5G 기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 개방('18.12),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평창올림픽 시연('18.2), 서울 도심 체험행사('18.6), 인천공항 셔틀 운행
드론	·'21년까지 국토조사·소방 등 분야에 공공수요 3,700대 발굴 ·드론의 원격·자율운행을 위한 한국형 관리체계 개발 착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최아름 서기관(☎044-201-3197) 및 과제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① 교통서비스 및 생활편의 향상			
·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교통정책조정과	안석환 과장 이호준 사무관	044-201-3804 3791
· 광역급행버스 운행거리 제한 확대 및 M버스 노선 확대	대중교통과	김기대 과장 정순열 사무관	044-201-3823 3826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도로정책과	이용욱 과장 최승욱 사무관	044-201-3875 3877
·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편	도로정책과	이용욱 과장 최승욱 사무관	044-201-3875 3877
· 종합적인 도로 관리·개선 방안 마련	간선도로과	이상헌 과장 안재혁 사무관	044-201-3888 3891
· 포항-영덕 등 지선 셔틀열차 도입, · 카셰어링 전용 구역 추가 설치	철도운영과	박지홍 과장 홍석표 사무관	044-201-3970 4774
· 국내선 생체인식활용 탑승수속 및 · 직항 승객의 보안봉투 사용 폐지	항공정책과 항공보안과	윤진환 과장 류나린 사무관 김용원 과장 성정용 사무관	044-201-4204 4186 044-201-4232 4239
· 택시 정액요금 제도 확대	택시산업팀	박준상 팀장 이성훈 사무관	044-201-4770 4756
· 항공-철도 티켓 통합발권 시스템 구축	항공정책과	윤진환 과장 김준성 사무관	044-201-4204 4189
· 자동차 폐차이행 확인제 도입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상일 과장 홍일산 사무관	044-201-3855 3856
·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 확대	자동차정책과	박대순 과장 정송이 사무관	044-201-3835 3838
② 서민주거안정			
·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한 기숙사 건립 지원 · - LH 전세임대 · - 집주인 리모델링	주거복지기획과 공공주택정책과 주택정비과	윤종수 과장 손창호 사무관 김홍목 과장 김종욱 사무관 조관우 사무관	044-201-3352 3353 044-201-4504 4580 044-201-3387
· 비근로소득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가입	주택기금과	김헌정 과장 허 온 사무관	044-201-3337 3340
·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 연내 확보	행복택지기획과	구헌상 과장 원일웅 사무관	044-201-4521 4522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공모	공공주택공급과	이병훈 과장 김수현 사무관	044-201-3538 441
·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본격 추진	공공주택정책과	김홍목 과장 김종욱 사무관	044-201-4504 4580
· 마이홈센터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주거복지기획과	윤종수 과장 노지훈 사무관	044-201-3352 4740
·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주택기금과	김현정 과장 문희선 사무관	044-201-3337 3338
· 주공공 담보부 전세대출자 가입 허용	주택기금과	김현정 과장 문희선 사무관	044-201-3337 3338
·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 완화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정재형 사무관	044-201-3364 3376
·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 준공 (12월) 및 추가 조성사업 착수(6월)	녹색건축과	송시화 과장 육인수 사무관	044-201-3768 3769
· 공적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정책과	김홍목 과장 신보미 서기관	044-201-4504 4506
· 이상 과열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부동산산업과	김정희 과장 유지현 사무관	044-201-3411 3413
· 8.2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주택정책과	김영국 과장 최병길 사무관	044-201-3317 3318

③ 일자리 창출

· 건설산업 선진화	건설정책과	김영한 과장 박정혁 사무관	044-201-3504 3497
· 화물운수업 업종개편	물류산업과	김유인 과장 김민선 사무관	044-201-4016 4018
· 위수탁 차주보호·화물차안전운임 도입	물류산업과	김유인 과장 김민선 사무관	044-201-4016 4018
·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구역 확대	물류산업과	김유인 과장 김대성 사무관	044-201-4016 4025
·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 사업자의 비용전가 금지	택시산업팀	박준상 팀장 이성훈 사무관	044-201-4770 4756
·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대중교통과	김기대 과장 문기성 사무관	044-201-3823 3832
· 軍 운전 장병 취업 지원 강화	대중교통과	김기대 과장 홍종길 사무관	044-201-3823 3824
· 댐·정수장 등을 신기술 시험공간으로 개방	수자원산업팀	김철기 과장 장이슬 사무관	044-201-3636 3642
· 공간정보 클라우드 구축	국가공간정보센터	손종영 센터장 정은정 사무관	044-201-3487 4876
· 대중교통 빅데이터 민간 개방·공유	교통정책조정과	안석환 과장 이호준 사무관	044-201-3804 3791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4 성장동력 확충			
·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토지정책과	김상석 과장 공경화 사무관	044-201-3410 3399
	부동산산업과	김정희 과장 김중한 사무관	044-201-3411 3414
· ICT기술 접목 수량·수질 실시간 관리	수자원개발과	박병언 과장 임성훈 사무관	044-201-3602 3607
· 선박 담수 플랜트 기술 개발	수자원산업팀	김철기 과장 장이슬 사무관	044-201-3636 3642
·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 공급시설 도입	수자원산업팀	김철기 과장 장이슬 사무관	044-201-3636 3642
· 교통O2O 스타트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신교통개발과	신윤근 과장 김선욱 사무관	044-201-3817 3820
· 첨단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시설정보과	나기호 과장 지동선 서기관	044-201-4006 4007
· 인천공항 4단계 사업 본격 착수	공항정책과	나웅진 과장 천홍식 사무관	044-201-4328 4337
· 인천공항 배후단지 지속 확충	항공산업과	성호철 과장 좌명한 사무관	044-201-4219 4223
· 해외진출지원공사 설립	해외건설정책과	이두희 팀장 김지우 사무관	044-201-4665 4583
· 해외수주를 위한 전략적 글로벌 외교 확대	해외건설정책과	김성호 과장 장창석 사무관	044-201-3516 3517
5 미래대비 효율적 국토이용			
·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정책과	김규철 과장 나진항 서기관	044-201-3646 3650
· 남북 경제협력 조성 기반 마련	국토정책과	김규철 과장 류경진 사무관	044-201-3646 3651
· 접경지역 고속도로 연결사업	도로정책과	이용욱 과장 이기세 사무관	044-201-3875 3874
·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철도건설과	임종일 과장 이원돈 서기관	044-201-3950 3951
· 서울·수서·부산역 역세권 개발	철도정책과	박일하 과장 김창연 사무관	044-201-3938 3942
· 국가 귀속 민자역사 개발시 공공성 강화	철도정책과	박일하 과장 김의연 사무관	044-201-3938 3949
· 공항경제권 구상계획	항공산업과	성호철 과장 좌명한 사무관	044-201-4219 4223
·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기획총괄과	윤의식 과장 조민우 사무관	044-201-4903 4904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6 국민 안전 및 혁신성장			
· 건설현장 책임성 강화	건설안전과	고용석 과장 허원석 사무관	044-201-3573 3574
· 건설기계 사고 저감	건설산업과	박병석 과장 조태영 사무관	044-201-3538 3542
· '19년까지 사회기반시설 내진성능 보강	건설안전과	고용석 과장 오진수 서기관	044-201-3573 3587
· 건축물 지진성능 강화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 김준 사무관	044-201-3755 4837
·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 김부병 사무관	044-201-3755 3765
· 교통 안전 강화	교통안전복지과	박정수 과장 오한영 사무관	044-201-3862 3863
· 혁신성장 선도사업 - 스마트시티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 정재원 사무관	044-201-4845 4097
· 혁신성장 선도사업 - 자율차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재평 과장 김진후 사무관	044-201-3847 3848
· 혁신성장 선도사업 - 드론	첨단항공과	정용식 과장 서정석 사무관	044-201-4307 4253

참고 2

2018년 우리 국토 · 교통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정책명	달라지는 내용	시행
주택	· 재개발·재건축의 일반 경쟁 원칙 도입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등 예외 허용	'18.2~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 시행	·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천만원 초과시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	'18.1
	· 부실시공 근절 대책	· 부실시공 등 사유로 영업정지 및 건진法 상 벌점 등을 받은 업체 대상으로 단계적인 선분양 제한 · 감리비 지급 절차 개선으로 책임 감리 실현	'18.12~
	·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상품 출시	· 현행 구입·전세대출보다 금리, 대출 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상품 출시 * (구입) 금리 최대 △35bp (전세) 금리 최대 △40bp,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	'18.1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확대	· 만 19세 이상의 청년에게도 2천만원 한도로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 현재(만 25세 이상) → 변경(만 19세 이상)	'18.1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개선	· 취업준비생 등 청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를 상향(月 30→月 40만원) 하고 상환비율을 하향(25→10%, 우대형 한정)	'18.1
	· 2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0.2% 금리우대(신설) 지원	'18.1
	· 부동산 전자계약시 우대금리 신설	·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 취급시 차주가 부동산 전자계약서 제출하는 경우 0.1% 금리우대(신설) 지원	'18.1~ 12
	· 주거급여 지원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1.16%) 및 최저보장수준 (임차 : 2.9~6.6%, 자가 : 8%)상향	'18.10~ '18.1~
건설	·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 의무화	· 국토부 및 산하기관 모든 공사현장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전면 적용 * 건설사가 임금 등을 인출·유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등에게 송금만 가능	'18.1~
	· 타워크레인 설비 안전성 관리 강화	· 20년 이상 크레인 연식제한, 부품 인증제 도입, 검사기관 평가제도 등 제도개선(건설기계관리법 개정)	'18.6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 설립	· 사업 발굴 및 개발, 금융 지원 등 투자개발사업(PPP) 각 단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PPP 역량 보완 및 해외 PPP 사업 수주 지원	'18.6

구분	정책명	달라지는 내용	시행
	· 지하안전법 시행	·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강화·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 * (주요내용)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18.1~
	· SOC성능평가제도 도입	· 기존 안전성 중심의 사후적 안전관리에서 사용성·내구성까지 종합 평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18.1.18)	'18.1~
	·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 수립하여 기술개발과 민간활용 촉진 * (주요내용)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활용을 위한 단계별 계획, 법·제도 개선방안, 시범사업 추진 등 중장기계획	'18.7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 선제적 관리체계와 자원대책을 정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18.12
수 자 원	· 가뭄대응능력 강화	· 지역별 가뭄 취약성 분석 및 가뭄 취약지도 구축 · 지하수 공공관정을 활용한 가뭄대비 비상용수 공급체계 구축	'18.6~ '18.12
	· 입체적 홍수방어	· 국토부·환경부·행안부가 부처 공동으로 도시하천 유역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침수 예방 * 청주, 천안, 고창, 여수, 창원, 부산, 울산 등 10개소	'18.8~
	· 홍수예보 강화	· 홍수특보지점 확대(50 → 55개소) · 하천고수부지 침수 예측정보 제공(한강 등 4대 수계)	'18.5~
교 통	· 공공형 택시 확대	· 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에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를 도입하고, 이에 맞춰 버스운영 체계의 합리화를 병행	'18.1~
	· 택시정액요금제 도입	· 택시 부당요금 수취 근절을 위해 공항 등 특정구간에 정액요금 적용하는 구간요금제 도입	'18.11~
	· 자동차 연비보상제 시행	· 연비를 허위·과다표시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자는 자동차소비자에게 금액, 수령방법 등 보상계획을 충분히 안내하고 보상하도록 의무화	'18.1~
	· 평창올림픽 자율주행차 시연	· 올림픽 기간중 자율주행 기술 시연 및 일반인 탑승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수용성 제고	'18.2~3
	· 대국민 자동차 포털	· 자동차 등록, 리콜대상 확인, 검사 예약, 보험 가격 비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업무를 관공서 방문 없이 포털에서 처리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18.3~
	· 물류 서비스 개선	· 강력 범죄자(폭력·성·아동범죄 등) 종사자격 취득제한, 택배차량 주정차 단속유예 한시적 확대	'18.下
		· 콜밴 부당요금,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및 콜밴 신고윤임제 도입	'18.12

구분	정책명	달라지는 내용	시행
	· O2O 기반 물류산업 지원 및 물류 인력 일자리 확대	· 물류투자 펀드를 활용한 신선식품, 바이오상품 등 생활물류 스타트업 기업 발굴·지원 · 유통·IT 등 유관 산업까지 포괄한 물류산업 채용 박람회 개최	'18.1~ '18.9
항공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	· 제1터미널 대비 출국수속 시간단축(45→30분) · 여객/화물처리 능력 증대(여객: 54→72백만명/ 화물: 450만→500만톤), 항공기 주기장 확대(109→163개소)	'18.1
	· KTX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 운영	· 이동시간이 경부선(서울역 경유)은 약 15~30분, 호남선(용산역 경유)은 약 30~45분 감축(KTX+공항철도 이용 대비) * 인천공항내 출국소요 시간도 최소 20분 이상 단축	'18.1
	· 국내선 지문 이용 탑승수속 시범도입	· 국내선(김포-제주) 항공기 탑승시 지문 이용 탑승수속 도입으로 신분확인 시간 단축(5→1분) 등 승객편의 제고(향후, 김해·대구·청주 등으로 확대)	'18.1~
	· 면세점 액체류보안봉투(STEB) 사용 개선	· 직항 승객의 면세점 액체류 보안봉투 사용 폐지로 승객불편 해소 및 면세점 업계 비용절감(年 20억원)	'18.7~
	·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	· 개인부담 경감 및 高비용 실업자 최소화, 안정적인 조종사 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항공사별 취업보장형 교육체계 도입 * 8개 국적항공사 연간 200명 선발	'18.1~
	· 비행훈련기관 안전관리 강화	· 조종사를 양성하는 대학, 사용사업체 등은 교관 및 훈련시설·장비 등을 확보하여 정부의 심사를 받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의무화	'18.4~
	· 드론산업 육성	· 위험도·성능 기반 드론 분류기준 정립 및 네거티브 원칙의 차등규제 방안 마련 · 규제완화, 재정지원을 통해 상용화 사례를 창출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 추진 · 공공분야 드론활용 확대('17.6 기준 300 → 600대) 및 공공부문 국산 도입율 40%까지 제고('17년 24%)	'18.9 '18.3~ '18.12
	· 인천·김포공항 스마트공항화	· 운영로봇 도입 터미널·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셔틀 운영, 모바일 메신저 챗봇 도입(인천공항), 공항 항행시설 점검용·외곽경비용·조류퇴치용 드론 도입(김포공항)	'18.1~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 확대	· 항공교통서비스평가(2년주기)를 국적 항공사에서 외국적 항공사까지 확대하여 외항사 서비스 경쟁 유도	'18.4
	· 교통약자 항공서비스 이용편의기준 마련	· 항공사 및 공항공사가 교통약자(장애인·임산부 등)에게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 기준을 마련	'18.12

구분	정책명	달라지는 내용	시행
	· 소비자 중심 국제선 운송약관 시행	· 승객에게 불합리한 국제선 약관*을 소비자 중심으로 정비 * 수하물 요금 인상 시 기 발권한 승객에게는 적용 불가 등	'18.1
도로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서울외곽 민자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3개 노선 통행료 인하	'18.3~
	·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성 강화	· 운영업체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먹거리 적정가격 유도 · 전기·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복합충전시설 확충(8개소) · 전국 휴게소(190개소) 모바일 주문 서비스 도입 등	'18.1~
	· 하이패스 IC 확대	· 휴게소, 본선에서 바로 물류, 관광시설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 IC 3개소 개통 * 중부내륙지선(유천, 북한풍), 대구-포항선(임고)	'18.1~
	· 고속도로 접속부 정체 개선	· 정체가 발생하는 분기점·나들목 구간에 차로 확장 및 갓길차로 설치 등으로 정체 해소 * 진출차로 확장 : 수원신갈IC (경부선) 갓길차로 설치 : 강일~상일IC, 상일~하남JCT(서울외곽선)	'18.1~
	· 신호체계 개선	· 통행패턴에 맞게 신호주기를 자동 조정하여 지정체 완화와 저비용으로 교통혼잡 문제 해소 * (도시부) 교통량이동방향을 분석 최적 신호주기 운영(4개시 신규도입) * (지방부) 감응식 신호기 확대('18년 73개 설치)	'18.1~
	·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안전 강화	· 안전시설 확대 등을 통한 안전 강화 및 사고예방 * 졸음쉼터 16개소, 횡단보도 조명 보강 718개소, 마을주민 보호사업 30개소, 국도변 보행로 설치 51개소	'18.1~
철도	· 고속철도 접근성 향상	· 지선 서틀열차 도입, 철도역 카세어링 전용구역 확대 * (서틀) 포항~영덕 14회, (카세어링) 전국 100면 이상	'18.1~
	· 교통약자 보호 강화	· 지하철 내 교통약자를 위하여 E/S·E/V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AR기반 철도역 안내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지자체 도시철도 역사에 E/S 40개, E/V 10개 설치 지원	'18.2~
	· 철도 공공성 강화	· (주)SR 공공기관 지정 · 점용기간 만료되는 민자역사의 국가귀속	'18.2
	· 철도시설 안전강화	·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도시철도 시설개량 * 서울 1~4호선, 부산 1호선 · 교량·터널 등 고속철도 시설의 내진성능 강화 * 고속철도 내진율 : ('17)87.2% → ('18)100% · 정비조직 인증제, 정비기술자 자격제도 도입 및 노후차량 정밀안전진단 법제화	'18.12

참고 3

2018년에 착공·준공되는 주요 사업

구분	사업명	시기	사업비	기대효과
국토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18.下	11,439억원	· 쇠퇴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 지역주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주택	· 장수명주택 시범사업 추진 * 서울 양원지구 1,216세대	'18.10	-	· 장기간 유지되고 다양한 수요 및 요구변화에 대응 가능한 주택 공급
	· 공업화주택 실증사업 착공 * 천안 두정 시범사업 40세대	'18.2	35억원 (정부출연금 20억원)	· 1~2인 소형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 내 전월세난에 대응 가능한 주택 공급
수자원	· 지하수댐 시범사업 착공	'18.4	120억원	· 물이 부족한 도서지역의 염수피해 방지 및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 광양(I)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착공	'18.1	1,688억원	· 노후된 광양(I) 공업용수도(여수 광양 공단)의 단수사고 예방
	· 수도권(IV)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착공	'18.1	213억원	· 수도권(IV) 광역상수도(시흥, 안산, 시화공단 등)의 단수사고 예방
	· 광양(II)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준공	'18.12	775억원	· 광양(II) 공업용수도(여수, 광양, 순천, 보성, 고흥)의 단수사고 예방
	· 구미권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 준공	'18.12	336억원	· 구미지역 국가산업단지 日 8.8만톤의 용수 공급
	· 장항국가생태산단 용수공급 사업 준공	'18.12	101억원	·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日 1.1만톤의 용수 공급
	· 영산강(2차) 급수체계 조정 사업 준공	'18.12	472억원	· 빛그린 국가산단, 담양, 장성, 함평 日 2.9만톤의 용수 공급
	· 운문댐 비상공급시설 준공	'18.2	275억원	· 운문댐에 日 12.7만톤의 물 공급
	· 연초댐 안전성강화 사업 착공	'18.11	150억원	· 댐 본체 비상방류시설 설치 · 댐 취수탑 내진보강
	·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준공	'18.12	1,385억원	· 복측방류 및 이상 홍수에 대비한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
	· 국가·지방 하천정비사업 (착공 95건, 준공 60건)	'18.3~	9,285억원	· 홍수대비 및 친수공간 제공

구분	사업명	시기	사업비	기대효과
교통	·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K-City' 완공	'18.12	110억원	· 다양한 조건을 가정한 반복·재현 시험을 통해 자율차 기술개발 촉진
	·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18.12	10억원	·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율차 기술개발 가속화
	· 경주, 목포 등 화물차 공영차고지 8개소 준공	'18.下	1,085억원	· 화물차 2,138대 주차공간 확보로 불법 주차차 해소
항공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18.1	49,303억원	· 여객처리능력 증대 (54백만→72백만명)
	· 김포공항 국제선 편의시설 확충 공사 준공	'18.6	450억원	· 여객 편의시설 확대 (52천㎡→78천㎡)
	· 김포공항 국내선 리모델링 공사 준공	'18.9	2,500억원	· 여객 편의시설 확대 (리모델링 77천㎡, 증축 11천㎡)
	· 드론 비행시험장 착공	'18.上	100억원	· 마음 놓고 개발·시험할 수 있는 비행시험장 확대(3→5개소)
	· 항공레저 이착륙장 3개소 조성(부여·새만금·구미)	'18.12	9억원	· 항공레저 기반확대 및 활성화 촉진
도로	·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준공	'18.2	23,332억원	· 연간 1,730억원 물류비 절감 · 주행거리/시간 : 21km/40분 단축
	· 경부선(영천-언양) 확장사업 준공	'18.12	8,685억원	· 교통사고 절감편익 14억원/年 · 연간 434억원 물류비 절감
	·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 준공	'18.1	3,696억원	· 광역교통망 구축(12.1km) · 통행시간 단축(23.9분)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착공	'18.4	19,241억원	· 새만금-전주 간 25분 단축 · 통행속도 30km/h 증가
	· 김포-파주 고속도로 착공	'18.6	17,329억원	· 수도권 제2순환망 구축 · 수도권 서북지역 균형개발 촉진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착공	'18.下	16,069억원	· 서울-광명KTX역 13분대로 단축 · 지역경제 파급효과 4천억원 이상
	· 서부내륙(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착공	'18.下	37,217억원	· 서해안 및 경부선 교통량 분산, 물류비 절감 등
	·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착공	'18.下	1759억원	· 포천-화도 18분대로 단축 · 통행속도 17km/h 증가
	· 소천-도계2 등 일반국도 41개소 준공	'18.下	59,455억원	· 간선망 확보, 국토 균형발전 도모 · 교통난 완화, 통행시간 단축

구분	사업명	시기	사업비	기대효과
	· 정선-북면 등 일반국도 11개소 착공	'18.下	8,374억원	· 낙후지역 개발 촉진 · 교통사고위험 해소
	· 조리-법원 등 9개소 국가지방지방도 준공	'18.下	13,822억원	· 물류비 절감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 감일-초이 등 3개소 광역(1)·혼잡(2) 도로 준공	'18.下	2,654억원	· 광역교통망 구축(6.6km) · 교통 혼잡구간 해소(7.3km)
	· 식만-사상 등 6개소 광역(3)·혼잡(3) 도로 착공	'18.下	1,677억원	· 광역교통망 구축(13.3km) · 교통 혼잡구간 해소(14.5km)
철도	· 동해선 포항~영덕구간 개통	'18.1	10,272억원	· 포항지역 경제활성화
	· 문산~임진각 전철화사업 착공	'18.上	388억원	· 경기북부 교통편의 증진 및 남북 연계철도 구축
	· 소사~원시 복선전철 개통	'18.6	17,883억원	· 소사동(부천시)~원시동(안산시) 24분대로 단축
	·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개통	'18.12	14,015억원	· 송파·강동지역 교통난 완화 · 잠실운동장-보훈병원 19분대로 단축
	· 신안산선 착공	'18.12	33,895억원	· 경기 안산시흥지역 30분대로 단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착공	'18.12	33,641억원	·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거점역 30분대 연결(파주~동탄)

< 2018년 6대 정책목표 >

1.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 미래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ی겠습니다.
3. 안전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 주거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5. 교통	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국토	골고루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건설산업] 산업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일자리 개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전자대금시스템*을 연내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고, 적정임금제 도입 추진('18~, 2년간 시범사업)

*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며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국민연금·건보 가입대상을 확대(20→8일, '18년말)하고, 엔지니어링 종합 심사 낙찰제를 도입('18.12)하여 적정대가 확보 및 청년취업 촉진

- (산업 선진화) 칸막이식 업무영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원도급 직접시공 확대 및 발주제도 개선** 추진('18.10)

* 원도급은 종합공사업체만, 하도급은 전문공사업체만 가능하도록 한 경직적 업역 규정

** 공공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별 →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

- 적정성 심사기준 보완*, 대금보호 강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입찰담합 등 불공정 관행 제재방안 마련('18.10)

* (예)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 하도급에 대해 심사하고 있는 현행기준을 상향 검토

□ [운수산업] 공정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공정기반) 택배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화물운수업 업종 개편을 추진하고, 위수탁 차주보호·화물차안전운임 도입 등 제도개선
 - * 업종개편, 지입제 개선 등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국회 계류중) 개정후, 6개월뒤 시행
- SR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18.2)하고, 항공 운수권 기준* 및 슬롯 운영 제도개선('18.10) 등 항공 공공성 강화
 - * 국적항공사 독점운항 노선 재평가제 도입, 인기노선 운수권 회수기준 강화 등
- (처우개선)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비용전가 금지, **택배 주정차 허용구역 확대**,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등 근로 여건 개선

□ [인력양성]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 구축

- (건설산업) 기능인력 경력관리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18.下)하고, 특급기술자에 대한 등급 세분화(특1, 특2) 등 역량강화 방안 마련('18.10)
- (항공산업) 맞춤형 조종사 수급을 위해 “先선발-後교육”을 연내 모든 국적항공사에 도입하고, 항공장학재단 설립 추진 등 취업지원 강화
- (물류산업) 펀드투자 지원 협의회를 구성('18.1)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이공계 인력양성 강화 및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18.9)
- (공간정보) 창의형 교육과정 개편 등 인력양성을 강화('18, 670여명)하고, 공간정보 클라우드*·협업공간 무상 제공 등 창업 지원
 - * 스타트업 등에 서버, GIS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

□ [공공분야] 일자리 지원 인프라 강화

- (정규직 전환) 산하기관 비정규직 4.2만명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2.9만명을 대상(전환율 71.7%)으로 '20년까지 정규직 전환 추진
- (공공인프라 강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수립('18.3), 일자리 통계

개선 및 지표개발(18.5)을 통해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기반을 마련

2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점 육성 및 성과 가시화

- (스마트시티) 백지상태의 부지에 '21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국·내외로 확산
 - * 「스마트시티 특위」를 통해 기본구상 마련(18.1) 및 세부계획 수립(18.12)
- 데이터 허브, 스마트 도시재생 등 기존도시 대상 10대 스마트 시티 모델을 창출하고, 도시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 * 스마트 시티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입지규제 특례 도입 등
- (자율차) 가상실험도시 'K-City'*를 완공(18.12)하여 민간·학계 등에 개방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도로 테스트베드 착공(18.8)
 - 평창올림픽 시연, 서울 도심 대규모 체험행사(18.6) 등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상용화에 대비하여 보험제도안(18.6) 및 안전기준(18.12) 마련
- (드론) 긴급수송·측량 등 공공분야 드론수요를 발굴하고 기업과 매칭·지원하여 공공부문 드론 국산 도입을 확대('17, 24% → '18, 40%)
 - 조기 상용화 유도 및 드론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실시하고 네거티브 원칙의 차등규제*를 도입(18.6, 방안마련)
 - * 완구류급 드론은 필수 안전사항 외 규제 일소, 고성능드론 위주로 안전관리 강화
- (스마트 건설) 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미래형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분야에 3차원 설계기법을 우선 도입하여 첨단화·효율화 추진
 - * (목표) 공기 50% 단축, 사고율 45% 감소, 생산성 40% 향상
 - ** 건설자동화, IoT 기반 유지관리 등 R&D의 기술성평가 및 예타 통과 추진(18.3~12)
- (제로에너지)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선도방안*을 마련(18.6)하고, 창업지원, 세제감면(최대 15%취득세 감면, '18.1) 등을 통해 본격 확산

* 준시장형 공기업까지 제로에너지 건축 적용 확대, LH 등 공공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기존 산업** 부가가치 및 경쟁력 제고

- (부동산산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18~'22)' 수립·시행,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산업발전 기반 조성
 - * 상장 심사기간 단축(5~6개월 → 2~3개월), 공모 면제요건을 축소 등('18.12)
 - 허위매물·과장광고 제재 강화, 수익형 부동산 분양피해 규율방안* 마련('18.12),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선도('18.12) 등 권리보호 강화
 - * 분양형 호텔 등의 개별분양 적정성 및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등
- (공간정보) 현실-가상세계가 결합한 국토 가상화(Digital Twin)를 통해 현실을 분석·예측·제어하는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개발('18.6, 예타 신청)
 - 정밀 지상관측 영상 촬영용 위성발사를 추진하고,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R&D, '18~'22)하여 게임·가상훈련 등에 활용
 - * 해상도 50cm급으로 국토, 재난·재해, 접근불능지역 정보취득에 활용('19~'20, 과기부 공동)
- (물산업) 수량·수질을 실시간 관리하는 SWC(Smart Water City) 시범 사업을 추진(세종시, '18.4~'20)하고, 선박 담수플랜트 등 신사업 발굴
 - * 구미 산단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공급시설 도입 등('18.3월 예타신청)
- (교통·물류) 생애주기별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자율차·빅데이터 등과 카셰어링을 접목하여 신교통 서비스 제공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사업지정을 추진('18.12, 서울 양천 1개소) 하고, 첨단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18.12)하여 민간 기술투자 유도
- (항공산업) 동북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 등 주요국과 하늘길 확대, 환승시장 개척, 스톱오버상품 개발 등 신규수요 창출
 - 인천공항 T2 운영, 4단계 사업('23, 완료) 실시설계를 통해 年1억명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3단계 물류단지 FTZ 지정 등 배후단지 확충
 -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경제권 구상계획'을 수립('18.8)하고, 시범 선도공항 선정(3~4곳, '18.11) 및 지원체계 구축

- MRO JV 설립('18.8), 핵심기술 국산화 R&D 등 MRO 본격 육성

□ [해외진출] 전략적인 해외진출 지원

<지원 인프라 강화>

- (종합지원) 사업발굴·기획·설계·투자 등 투자개발사업(PPP) 수단계를 지원할 지원공사를 설립('18.6)하여 민관합동 해외 진출 확대
 - 글로벌인프라펀드 추가 조성, M&A 지원 등 PPP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 및 해외건설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8, 설계)
- (전략적 외교) 중점 협력국(10개국 내외)을 대상으로 기초 인프라 계획을 수립·제공('18.6)하고, 후속사업을 발굴하여 선단형 진출
 -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 신설('18.9), 親韓인사 양성을 위한 개도국 정책담당자 석사과정 신설('18.9) 등 협력 강화

<분야별 해외수주 역량 확충>

- (스마트시티) 월드뱅크 공동 개도국 확산사업('18~'19, 총 16억원)을 진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월드 스마트시티 워크 개최('18.9)
- (물산업) 대한민국 국제물주간('18.9), 국제기구·중국 등과 공동연구, 물 부족 국가 대상 맞춤형 MP 수립 지원('18, ODA) 등 협력 확대
- (교통) OECD 국제교통포럼(ITF) 의장국 수임*, 교통협력 MOU 및 교통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 * 59개국이 활동, 매년 장관회의 개최로 국제 교통 의제 주도, 한국은 '18.6~'19.5 의장국
- (첨단도로) 한국형 ITS 확산을 위해 수출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로드쇼('18.4) 및 초청연수('18.10)를 개최하고 '22년 ITS 세계대회 유치 추진
- (철도) 타겟사업에 대한 체계적 수출전략을 수립('18.5)하고, 터키·말·싱 고속철, 인니 경전철(2단계) 등에 대해 맞춤형 수주지원 강화
- (공항) 기존 低리스크 非투자 컨설팅 위주에서 건설·운영 패키지

3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재해대응] 지진·수해 등 재해대응 역량 강화

- (지진) 국토부 소관 SOC의 내진보강을 '19년까지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 마스터플랜도 마련('18)
 -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반영하여 SOC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보완하고 필로티·마감재 등 비구조재 내진설계 기준도 개선('18)
- (가뭄)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모든 댐에 대해 댐 용수 감량 및 비축을 최대한 실시하고 보령댐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 * 운문댐 : 비상공급시설(펌프장, 관로 2.6km)을 설치('18.2), 금호강 물 대체 공급
 - 보령댐 : 도수로 지속적 가동, 밀양·부안·평림·대곡·사연댐 : 광역·지방상수도 대체공급
- (홍수) 특보 발령지점 확대* 및 예측 강화(3시간 → 6시간前), 맞춤형 하천정비,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선도사업('18.8~, 부처합동) 등 추진
 - * ('17) 50개소 → ('18) 55개소 → ('19) 60개소 → ('20) 64개소 → ('21) 67개소

□ [생활환경] 시설물·건설현장 안전 강화

- (화재)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등 화재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 전수조사('18.1~)
 - * (1차)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 (2차) 공장·운수시설·창고 → (3차) 숙박시설·노유자시설
- (노후시설) 노후 SOC 및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선제적 관리 및 성능유지 방안 마련 추진
 -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정('17.11, 발의), 「건축물 관리법」 제정 추진('18.10)
- (크레인) 20년 이상 노후장비 연식제한, 부품인증제 도입, 중요 부품 내구연한 규정 등을 통해 안전성 강화('18.6,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 타워크레인 장비이력 관리시스템 구축('18.下) 및 허위등록 여부 전수조사(~'18.4)를 추진하고, 발주자·원청의 책임 강화 방안도 강구

□ [교통안전] 예방적 교통안전 강화

- (도로교통)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의 안전·생명을 우선하는 교통정책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식개선·시설확충·현장점검 동시 추진
 - *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7년 4,191명(잠정)에서 '18년 3,800명 이하로 감축 노력
-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설계(교통섬·지그재그 도로 등) 기준 마련,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대, 도로표지 개선안 마련('18.11)등 시설개선
-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사업용 차량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위험물질 운송에 대해 모니터링 시범운영('18.12) 등 안전강화
 - * 비상제동장치 장착시 250만원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버스 신차구입시 40만원 지원
- (철도) 노후시설 개량을 추진하고, 중단없는 관제 수행을 위해 관제 시스템 개선 및 제2 관제센터 건립방안 마련
- (항공) 항공사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도 평가·공개 제도를 도입('18.10)하고 관제 강화를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 운영('18.1)

□ [환경변화]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

- (미세먼지)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 친환경 소형 택배 화물차(1.5톤미만 전기·수소차) 도입 등 친환경 차량 운영을 확대
 - 미세먼지 흡착이 가능한 첨단 건설재료 개발(R&D 18.4~), 재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도로시설 개선('18.6, 화단설치기준 개정) 등 추진
-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에 맞춰 건물·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18.6)하고 부문별 감축전략 제시*
 - * (건축)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안) 마련, (수송)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정
- (물관리) 국토부(수량), 환경부(수질)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수량과 수질의 균형 있는 통합 물관리 추진

- 관계기관 공동연구(18.9)를 통해 낙동강 하굿둑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18.12)

4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맞춤형 지원] 서민 주거복지 기반 강화**

<생애단계별 ·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 맞춤형 청년주택 4.4만실 공급,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18.3), 청년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18.9, 100호 규모)
 - 기숙사 확충을 위해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및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18.6)
 - 금리를 최고 3.3%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월세대출 한도상향(월 30→40만원) 및 전세대출 지원강화(18.7)
- (신혼) 신혼희망타운 7만호 중 4만호의 입지 확정(2만호는 지구지정), 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 확대 및 공공임대 3만호 공급,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시(18.1)
- (고령)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9천호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 주택 안심센서 설치 근거 마련(18.6)
 - 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추진(18.7)
- (취약계층) 공적임대주택 9.9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18.10)하여 54만가구를 추가지원(82만→136만)
 - 긴급지원주택 공급(18.12), 보호대상 아동 전세임대 지원 강화(18.3), 2자녀 저소득층 버팀목대출 금리 우대(18.1) 등 지원확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주택 공급>

- (공공임대) 총 13만호를 공급(건설형 7만호, 매입형 2만호, 임차형 4만호)하고,

공공 리모델링,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과 연계 강화

○ (공공지원) 선도사업('17.11 착수) 성과 검증 및 연내 총 4만호 부지 확보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체계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법무부 공동소관으로 변경('18.6, 개정안 제출), 공공임대주택유형을 수요자 중심으로 단계적 통합
 - 분양전환시 협의 절차 의무화 등 제도개선('18.6월), 도심 중저밀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하여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거복지 전달체계)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구축('18.6), 마이홈센터 확대('17년 42곳 → '18년 52곳) 및 전문성 강화
- (사회임대주택) 사회적 경제주체에 2%대의 저리 기금 융자 도입 및 대출제한 요건 완화('18.3), LH 협력형 시범사업 공모('18.3)

□ [민간 임대시장]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 (임대차통계DB) 관계 기관이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하여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DB 구축('18.4)
- (임대등록시스템) 등록 임대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는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18.4), 등록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 (권리보호 강화) 임대인 동의절차 폐지 등 가입문턱을 낮추고('18.2), 모바일 가입 시스템 도입('18.3) 등 가입 편의성 확대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계약만료 1개월前→2개월前), 임대차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18.12, 주임법 개정)

□ [소비자 보호] 부실업체 제재 및 관리 강화

- (부실시공 제재)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의 先분양을 제한('18.6, 주택법 개정)
- (감리강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 예속되어 부실한 감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18.6, 주택법 개정)

-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확대(150 → 100세대 이상), 관리비 내역 공개 대상 확대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 추진

5 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교통혼잡]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 (광역교통) 만성적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청'을 설립('18, 법령 개정)하고 GTX-A노선 착공('18.12)등 광역급행 서비스 확대*
- (대중교통) 광역버스 운행거리제한 완화(30 → 50km, '18.上), M-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 확대, BRT 확충 등 출퇴근 편의 개선
 -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도입('18, 울산·세종·전주)
- (교통효율 개선) 수도권 동북부 등 권역별 교통대책 수립, 교통 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강화,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이용 효율 제고

□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편의 제공

- (고속도로) 대중교통 연계·환승을 위한 'ex-HUB' 확대,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 도입(190개소) 및 이용요금 개선 추진
- (철도) 이용 수요 중심으로 KTX 운영계획을 재검토하고, 사각지대 지선 셔틀열차 도입, 철도역 카세어링 구역 확대 등 접근성 강화
- (공항) 지문 이용 탑승수속 시범도입('18.1, 김포·제주), 안내·운반 로봇 도입('18.6, 인천), 자율주행 셔틀 시범도입('18.10, 인천) 등 첨단 인프라 구축
 - 항공-철도티켓 통합발권 시스템 구축, 도심공항터미널 운영('18.1, 삼성동·서울역·광명)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택시요금 정액제 도입('18.11)

□ [인프라] 거점간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 (도로) '18년까지 국가목표 간선망(7,266km)의 66%(4,778km)를 개통하고, '20년까지 국민의 96%가 30분 내 고속도로에 접근 가능한 도로망 구축

- (철도)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하고, 호남선 2단계(광주송정~목포)건설을 통해 고속철도 X축 완성
- (공항) 김포·제주·청주공항('18~'19완료) 등 거점공항 시설 확충, 충분한 협의를 거쳐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권리보호]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 (자동차) 「자동차리콜 종합대책」 마련('18.2), 한국형 레몬법 시행 대비 홍보, 허위·과다연비에 대한 보상시행('18.1)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자동차 민원 포털서비스('18.3), 승용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마련('18.6)
- (택배) 강력 범죄자(폭력·성 등)의 종사자격 취득제한('18.下), 손해 배상 본사우선배상 추진('19~, 표준약관 개정) 추진
- (운행정시성) 지연·결항률이 높은 항공사에 대한 제재 등 검토, 상습 지연열차 분석·운행시간 현실화를 통해 운행 지연 최소화
-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18.7), 장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18.12)

□ [공공성] 교통분야 공공성 강화

- (재정사업 전환) 국가 주요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도로·철도 사업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여 공공성 강화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울외곽 북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18.3) 등 3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통행료를 인하
 - * 서울-춘천('18.3), 서울외곽 북부구간('18.3), 수원-광명('18.4)
- (교특회계 개편) 도로·철도·항공분야의 안정적인 안전예산 확보를 위하여 교통안전관리계정 신설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 추진

- (교통약자)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확충, 신축 교통시설 BF(Barrier-Free) 인증 의무화('18.12) 추진

6 **골고루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미래대비** 지속가능한 국토기반 조성

- (국토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을 수립하여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균형발전·분권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국토비전 마련
 - * '18.3월 착수(발주) → '18.12월 시안 마련 → '19년 중 의견수렴 및 확정
 - 압축적 공간구조, 스마트·안전 국토 조성, 포용성 강화 등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하여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제시
- (도시계획) 유엔해비타트 '새로운 도시의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등에 반영('18.12)
 - 의료·교통·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국가최소기준을 마련('18.12)하고, 낙후지역은 우선 지원하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 「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17.12~'18.12)를 통해 생활인프라의 개념, 지표 설정, 법 제정 등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벨트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 * 통일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단계별 실행전략 등 마련('18.下)
 -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역, 9.3km) 공사 재개, 동해북부선(강릉~제진, 110km) 연결사업 추진 등 인프라 연결 추진

□ **쾌적한 국토** 생활여건 품격향상 및 효율적 활용

- (공동주택) LH 등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우선 도입하여 주택 디자인 개선 및 확산 유도

* ('18) 신혼부부 특화주택(국민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에 대해 우선 검토

- (공공건물) 다양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이 나오도록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18.12)하고, 건축에 특화된 개발·관리 프로세스 마련*

*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 단계 등을 별도로 규정('18.12, 건축서비스법 개정)

- (지역공간) 지역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디자인 관리체계를 도입('18.5)하고, 총괄건축가 등 전문가 지원체계 운영방안 마련('18.6)

* 융복합(6차 산업 등), 재생형, 연계·협력 사업 등을 중심으로 11개 시범 컨설팅 추진

- (녹지공간) 임차공원(지자체가 사유지를 임차) 등 새로운 형태의 도시 공원을 도입하고, 실효예상 공원예정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 용산공원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도록 기획전시, 다큐제작 지원을 추진하고, 新거버넌스 구축('18.12) 등 추진체계 개편

- (인프라 활용) 서울역·수서역 복합개발, 국가귀속 민자역사 공공 시설 활용 등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반시설 입체개발의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북정역세권 시범사업(LH, '17년 대국민 공모 선정) 등 추진

* 도로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17.12, 제정안 발의)

각종 기반시설 일체 : 「도시개발법」 개정('18.10, 개정안 발의)

- (난개발 방지) 비도시지역 대상 성장관리방안제도 활용 확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공성 강화

* 해제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의 참여기준 강화, 입지가능시설 범위제한('18.12) 등

1. SOC 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일자리 질 개선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34
2. (주)SR 공공기관 지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34
3. O2O업계와 기존업계 간 어떠한 방식으로 상생발전을 유도할 것인지? .. 35
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구체적 설립 일정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35
5. 필로티에 대한 안전 대책은? 36
6. 현재 9개댐의 가뭄상황을 관리 중인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36
7.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지? 37
8.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규제강화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37
9.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 임대사업자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 문제가 빈번한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인지? 38
10.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등록 임대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 38
11.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있는지? 39
12. 광역버스 운행거리제한 완화를 통해 개선되는 내용은? 39
13. 현행 환승할인 제도 하에서 광역 알뜰카드를 도입하여 교통비를
인하할 경우 재정지원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40
14. 공항 운영 자동화·무인화로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는데? 40
15. 리콜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는데, 금년 수립 예정인 「자동차리콜
종합대책」에는 실효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41
16. 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수선 등의
허가기준을 대수선 기준보다 완화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41

1. SOC 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일자리 질 개선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 임금체불·삭감 등 열악한 건설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그 간 당연시 되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계의 비용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
 -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은 건설근로자 임금 유용으로 인한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며,
 - 임금지급보증제, 퇴직공제부금 등도 소요재원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발주자가 부담하는 구조로서 업계의 비용부담은 없음
 - 다만,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행정 업무 증가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을 보완하여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음

2. (주)SR 공공기관 지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인사·조직개편 등 경영전반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견제기능이 강화될 전망
 -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경영실적을 받게 되며,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대상으로 편입되는 만큼, 업무 수행에 있어 경영진과 내부직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게 됨
- 이로 인해, 국가기간 교통서비스 제공자이자 공공지분 100%로 구성된 (주)SR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철도의 공공성도 확보 될 것

3. O2O업계와 기존업계 간 어떠한 방식으로 상생발전을 유도할 것인지?

- 기존 운수업계와 O2O플랫폼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적절히 발굴·홍보할 필요
 - 우선, 택시·버스·렌터카 등 운수업체와 O2O업체 및 정부·학계·연구소 등을 포괄하는 포럼을 구성해 여객운송업의 지향점 및 변화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 전세버스-위즈돔, 중소렌터카-이지식스 등 중소 운수업체와 O2O사업자 간 상생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

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의 구체적 설립 일정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 지원공사 설립 근거인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시행(4.25일) 직후 발기인 총회, 설립등기 등을 거쳐 6월말 설립 예정
-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할 계획
 - * 신흥국 투자개발사업 시장 규모(WB): '05년 403억불 → '15년 1,199억불(약 3배)
 - ** 일본 등 경쟁국은 전문 지원기구(예: 일본 JOIN)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PPP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중
- 우리 기업의 사업기회 선점을 위하여 정보를 발굴·제공하고 내부 금융, 법률,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구조화를 지원하며 투자 연계 및 직접 투자 등을 통해 금융조달을 지원하겠음

5. 필로티에 대한 안전 대책은?

- 필로티의 내진성능 개선을 위해 피해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설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예시 등을 마련하며, 건축구조 기술사의 내진설계 검토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 화재성능개선을 위해서는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 시 상부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 방화구획으로 구분하거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전문가 및 소방청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

6. 현재 9개댐의 가뭄상황을 관리 중인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 현재 가뭄상황을 관리 중인 댐들은 작년부터 비상공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생·공용수 공급에는 문제없을 전망이다
 - * 단계적 용수감량, 댐간 연계운영, 광역·지방상수도 및 저수지 대체공급, 도수로 가동 등
- 다만, 가뭄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자체 및 관련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물 절약 및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함

구 분		시행 중 대책
다 목 적 댐	밀양댐(경계)	• 지자체 수원(낙동강, 밀양강, 지역저수지) 대체공급(3.7만톤/일)
	보령댐(경계)	• 보령댐도수로 가동(최대 12만톤/일)
	주암댐(주의)	• 인근 댐(섬진강댐, 수어댐, 보성강댐) 연계운영(17만톤/일)
	부안댐(관심)	• 섬진강계통(광역) 대체(0.44만톤/일) 및 상류 저수지 연계 저류
	합천댐(관심)	• 수계 내 다목적댐(안동-임하댐, 남강댐 등) 연계운영(10만톤/일)
용 수 댐	운문댐	• 지자체 수원(낙동강, 금호강) 대체공급(10.4만톤/일)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12.7만톤/일)
	평림댐	• 수양제(농업용저수지) 연계 저류(1.0만톤/일)
	대곡-사연댐	• 대암댐(낙동강취수) 대체공급(17만톤/일)

7.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지?

- 그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함
-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감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 패러다임을 개편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토대로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전방위적인 홍보 및 교육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제고된다면 충분히 목표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

8.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규제강화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

- 규제 강화 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및 경과규정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산·확대해 나갈 예정
- 또한,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운영을 통해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도 변화를 적극 알릴 계획
 - * 다양한 미디어 활용 기획보도 및 합동 캠페인 추진,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 전략 마련
-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 자발적으로 교통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여 제도 수용성을 높일 계획
 - * 차량속도 연계 보험 상품 활성화, 첨단장치 장착시 재정 지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9.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 임대사업자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 문제가 빈번한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인지?

- 일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숙사 확충과 관련한 지역주민, 임대사업자와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 교육부, 지자체, 해당학교,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
- 특히, 공실 등을 우려로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음

10.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등록 임대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

- '17년 임대사업자(개인)는 6.2만명이 신규등록 하여 '16년 대비 31.2%가 증가되었고, 임대주택 호수는 19만채가 등록되어 '16년 대비 24.1%가 증가
 - 특히,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12월은 '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하여, '16년 동월(3,386명) 대비 117% 증가하였음

<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현황	
			증감	증가율
등록 임대사업자	19.9만명	26.1만명	6.2만명	31.2%
등록 임대주택	79만채	98만채	19만채	24.1%

11.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있는지?

-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 현재는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 제한을 하고 있으나,
 -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 부과 정도 및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기간(사유가 부실시공인 경우에 한정)에 따라 선분양 제한 정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
- 앞으로 주택법령 개정 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

12. 광역버스 운행거리제한 완화를 통해 개선되는 내용은?

-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생활권이 확대되면서 광역버스 운행거리 확대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 기존 광역버스는 행정경계로부터 30km까지만 운행 가능하며, 그 외 장거리 노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외버스로 운행 중
 - * 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50km까지 운행 가능
- 이에,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제한을 완화(30→50km)하여 광역버스 수혜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교통비 절감 추진(환승할인 적용)
 - * 평택, 이천 ↔ 서울간 요금 : (시외버스) 5천원 수준 → (광역버스) 3천원 수준
 - **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예고('17.12.1~'18.1.9)를 거쳐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개정 완료 예정

13. 현행 환승할인 제도 하에서 광역 알뜰카드를 도입하여 교통비를 인하할 경우 재정지원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국고 보조를 통한 일률적인 교통비 할인을 적용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 현재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기권 발행,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 지자체 시범사업도 병행하여 정확한 소요재원을 추계할 예정

14. 공항 운영 자동화·무인화로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는데?

- 공항운영 업무 중 일부는 무인화·자동화 될 가능성은 있으나,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공항서비스에 접목 되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일자리 축소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
- '17.12월 수립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2년까지 일자리는 약 6,320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18년 1,356명, '19년 797명, '20년 846명, '21년 1,403명, '22년 1,295명

15. 리콜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는데, 금년 수립 예정인 '자동차 리콜 종합대책'에는 실효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 리콜결합정보 수립·분석, 결합조사, 사후조치 등 리콜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 자동차관리관을 팀장으로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

○ 또한, 그간 리콜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필요시 대책에도 포함토록 하겠음

□ 아울러,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신고센터*'를 실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리콜 접수 외에도, 점검·수리 과정의 소비자 불만사항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 내 소비자 불만 신고센터 운영 중('17.12.1~)

16. 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수선 등의 허가기준을 대수선 기준보다 완화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창호의 증설, 벽물탈제거 등)의 경우 행위허가 기준 중 입주자 동의요건(2/3→1/2)만을 완화하고,

○ 그 외 행위허가 기준*은 대수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음

* 개축 또는 수선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설계도서 등 제출

국토교통부 2018 업무계획

더 많은 분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광역교통정 설립



- 설립·운영을 위한 법령개정('18년)
- 출퇴근시간 45분대 실현, 앉아서 출퇴근, 서민교통비용 절감 목표

대중교통망 확충



- 광역일출교통카드 도입 (교통비 최대 30% 절감)
- 광역버스 운행거리제한 완화(30→50km)
- BRT 종합계획 수립 및 환승시설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대



- 고속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 서울주요거점 20분대 연결
- 경부선 등 기존선 급행화

교통네트워크 구축

교통네트워크 구축



- 국민 96%가 30분내 고속도로 접근('20년)
- 고속도로 혼잡구간(176km) 50%감축('20년)



- 평택-오송 구간 용량확충·호남선2단계 건설을 통해 고속철도 X축 완성
- 한국형 준고속열차(EMU-250)도입



- 김포·제주·청주공항 시설확충
- 울릉·흑산공항 건설 추진

이용자 중심 서비스 편의 제공



- 고속도로·휴게소 ↔ 광역버스·철도 환승 확대 ('17년 9개소 → '20년 13개소)
- 휴게소 모바일 선주문·결제시스템 도입(190개소)
- 스마트톨링 시범사업('18년) → 본격시행('20년)



- 지선 셔틀열차 도입·역사에 카세어링 존 확대



- 스마트 탑승수속 김포·제주 시범도입(산분화인 5 → 1분)
- 안내·운반 로봇 및 자율주행 셔틀 (공항·주차장) 시범도입

교통분야 공공성 강화

고속도로 이용부담 경감방안 마련('18.12)



-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 서울외곽 북부, 서울-춘천('18.3), 수원-광명('18.4)
- 통행료 체계 개편
 - 화물차 통행료 할인 확대('18.6)
 - 고속도로 이용부담 경감방안 마련('18.12)

철도·도로 민자 → 재정사업 전환



- 고속철도 민간 → 철도공단 투자 전환 추진
- 국가간선도로망을 위주로 도로공사 투자로 전환

교통시설 특별회계 개편

- 교통안전관리계정 신설 등 교특회계 개편 추진
- 안전·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단계적 확대



교통약자·농어촌 등 교통사각지대 해소

-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 철도역사·터미널·공항 등 이동편의 개선
 - 신축 교통시설에 대한 BFI인증 의무화('18.12)
- 공공형 택시 전국 확대('18년)



서민주거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새정부 주거복지 비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주거급여·금융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4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급여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평균 136만 가구 연평균 20만 가구

'18년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임대 4.4만실(3.2만호) 공급 공공임대 2만호 준공, 공공지원 2.4만실 부지확보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 만19~39세,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최고 연 3.3% + 청약 기능, 비과세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월세대출 한도(30 → 40만원), 전세대출 대상(25세 → 19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 3만호 공급 혼인 7년 이내 및 예비부부 대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분양전환(15 → 30%) · 분양(공공 15 → 30%, 민간 10 → 20%)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구입) 2.05~2.95% → 1.70~2.75% (전세) 1.6~2.2% → 1.2~2.1%
<p>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 9천호 공급 무장애설계·복지서비스 연계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18.7) (LH) 고령자 주택매입 (고형자) 연금+임대주택 홀몸 어르신 안심센터 설치 근거 마련('18.6) 	<p>신혼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취약계층 공적임대 9.9만호 공급 공공임대 7.1만호, 공공지원 2.8만호 취약계층 지원 확대 아동빈곤가구, 중증장애인, 비주택거주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18.10)

임대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p>임대차 정보 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등록 시스템 및 임대차시장 DB 구축 *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 연계 	<p>임차인 권리보호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한도상향 등)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p>등록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확대 8년 임대시 영도세 종과해제 등
---	---	--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근로여건 개선

건설산업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18)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걱정 근절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채불임금(약 3개월분, 12인원) 보증



채비도급

페이퍼 컴파니

일감 몰아주기 가로채기



건설산업 혁신

물류산업

공정기반구축



택배차량 주차차 여건 개선



교육 및 취업지원

도시재생 뉴딜

-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센터 확충
-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양성된 전문가는 지원센터 취업 지원
-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청년 스타트업 등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건설업 고용지원 확대

- 체계적 경력관리
- 해외건설 전문가 DB 구축('18. 上)
- 건설기능인 전자카드제 도입('18. 下)
- 취업기회 확대
- 국제기구·글로벌 기업 등
인터파견·취업매칭



항공조종사 양성

- 항공조종사 先선발 - 後교육 시스템 도입
항공사가 교육비 부담, 대출보증 지원
8개 항공사 연200명('18년-)



군전역 예정자

- 군전역 예정자 여객차량 운송 자격취득
지원 → 인력 DB관리 → 업체매칭('18. 5-)
군내 전역예정자 대상 자격취득 교육시행



창업지원

공간정보

-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소프트웨어 구매 없이 창업 가능
- 공간드림센터 운영
무상 창업 협업공간(17. 12 서울, 19 세종, 20 전주)



대중교통

- 교통빅데이터 정보 개방 및
공유로 창업 지원('18. 下)



물류

- 정부·벤처 펀드투자 활성화
협의회 구성('18. 6)
-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18. 9)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건설안전

건설현장 사망인원을 **50%** 이하로

*사망인원율: 근로자 1만명 중 신재 사망자수



(사망인원율, %/10,000)

발주자·원청 책임강화



- 단계별 발주자의 책임명시, 미이행시 제재
-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하청 동시 처벌

안전관리제도 이행점검 강화



- 건설안전 전담조직 신설
- 안전 종합정보망구축('20년)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진단

- 허위연식 전수조사
- 안전사고 2진 아웃제 (1회 영압정지, 2회 아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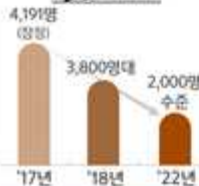
첨단기술 적용

- 건설자동화 R&D
- 스마트 건설안전 로드맵 마련('18년)



교통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이하로



보행자 중심 속도관리 체계



- 마을인근도로 보호구간 확대
- 차량 속도저감 유도시설 설치 (차로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단차형 횡단보도 등)

취약부문 개선

- 사고다발지점 개선
- 위험구간 도로개선
- 화물차량 관리강화

첨단기술 활용

-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LDWS, AEBs 등)
- 교통신호 개선사업
- 빅데이터활용 도로위험평가

[운행거리 1억km당 사고건수]



[100만 비행횟수 당 사고건수]



- 도후철도 시설 집중 개량 지원 * 서울 1~4호선, 부산1호선
- 철도차량 생애주기 관리강화
- IoT 등 첨단기술 접목



- 지능형 안전관리·예방 체계 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8~'22)
- 급성장 LCC 종합 안전점검
- 안전도 평가도입, 항공교통센터 운영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국가핵심선도사업 ①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조성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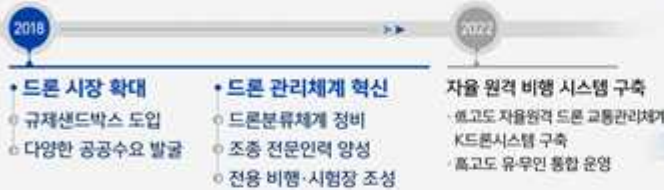
국가핵심선도사업 ②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통해 이동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국가핵심선도사업 ③ 드론

본격적인 무인항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산업의 혁신
잠재력있는 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